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더 죽어야 하는 겁니까”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1.24 18:3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 민주당 앞 농성 돌입

연내 법 제정 촉구...정기국회 곧 끝나 '촉박'

민주당 “이번 회기 처리 어렵다” 반발 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앞에서 집중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 문화제로 이어져 저녁까지 진행됐다. 이날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까닭에 집회는 최소 인원만 참가했다. 대신 99개 의자를 채운 산재 사망 노동자의 영정이 자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집행위원장은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태안화력발전소로 같이 갔으면 한다. 지옥 같은 일터에서 한 시간 일해보고 결정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농성에 돌입하며 “모든 노동자의 죽음은 지금의 법이 허술해서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 처리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더 물러날 공간도 없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은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평균 벌금 450만 원 벌금으로 때운다. 그래서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6명이나 된다. 코로나19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한국의 산업재해다. 산재가 아니라 살인이다. 국가가, 정치권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 헌화만 놓고 가는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2년 전 용균이가 떠났지만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지금도 발전 노동 현장은 하청이 존재하고, 임금 착복이 이뤄지고 있다. 또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죽음의 행렬을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전태일 3법과 노동개악 저지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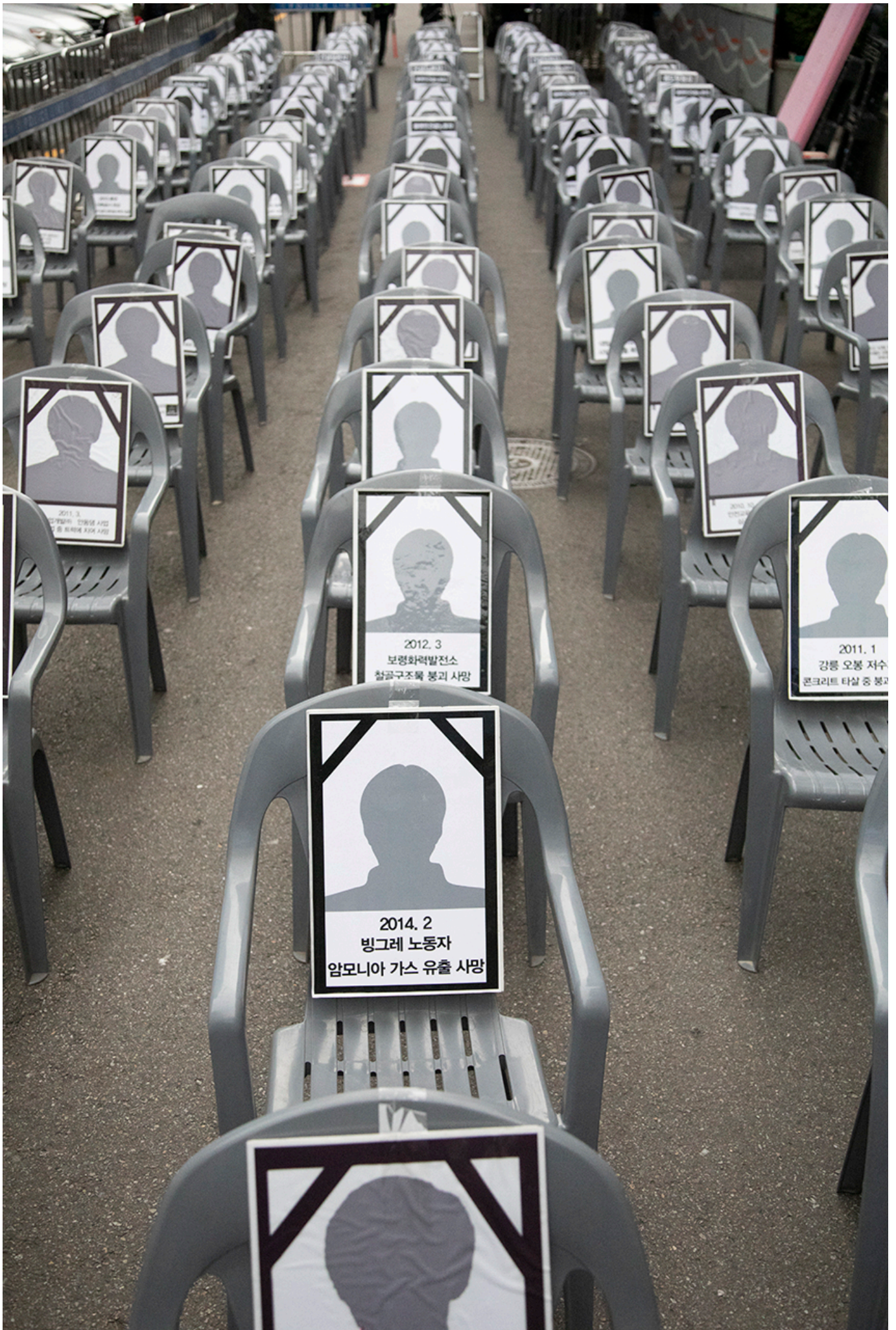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김한주 기자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